4년간 결핵 걸린 초등 교직원 3배 증가

2013년 71건→2016년 114건

초등학교 교직원 21건→60건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 4년간 결핵에 걸린 초등학교 교직원이 3배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질병관리본부의 최근 4년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내 결핵환자 역학조사 자료에 따르면 결핵에 걸린 학생 수는 2013년 341건에서 2016년 201건으로 줄어든 반면 교직원은 71건에서 114건으로 늘어났다.

특히 결핵에 걸린 초등학교 교직원은 2013년 21건에서 2016년 6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렇듯 교직원 결핵발생 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지난해 2월 국회가 '결핵예방법'을 개정했음에도 교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따르면 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한 차례 결핵검진을 받고 학교에 소속된 기간 중 한 차례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재직기간 잠복결핵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원 및 직원들이 예산 문제로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검진 지원 외에 교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교원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가 우선 2017년 유치원과 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검진을 추진하기로 했었지만, 고등학교 교원은 고1 학생 검진을 하는 학교의 희망자에 한해 일부를 진행하고, 유치원 교원의 경우도 올해 하반기희망자에 한해 보건소를 내원할 경우 검진을 시행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관련 매뉴얼 등 체계화된 지침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도 교직원에 대한 잠복결핵 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각 시도 교육청은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일선학교 교원들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을 얼마나 받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유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진 2016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교원들의 잠복결핵검진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교육청이 없어 사실상 교원 결핵관리는 방치돼 있다"며 "잠복결핵검진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고 검진수가가 높기 때문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예산계획 등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2017년 역대 두번째로 더운 해 기록될 듯

2017년이 기상관측 사상 두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고다드 우주연구소(GISS)는 17일(현지시간) 올해 9월이 지난 137년 기상관측 역사상 4번째로 더운 한 달이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지구의 평균 기온은 1951~1980년 9월 평균 기온보다 0.80도 높았다. GISS 기상관측 사상 가장 더운 9월 기록은 2016년과 2014년(평균보다 0.87도 상승), 2015년(평균보다 0.82도 상승) 순이다.

CBS 등은 GISS가 전 세계 약 6300곳에 있는 관측소와 배를 이용한 해수면 측정, 그리고 극지 연구소에서 관측한 기온 등에 관한 정보를 분석해 도출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온이 2016년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고 전했다.

기상학자 개빈 슈미트는 현재 추세로 볼 때 2017년이 2016년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확률이 80%라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올해 9월 지구 평균 기온이 NOAA의 기상관측 138년 역사상 4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북미 지역 경우 8번째로 높은 9월 기온을 기록했고, 특히 미드웨스트와 미시시피 밸리 지역 경우 사상최고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 경우 1910년부터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9월 기온을 기록했다. 아시아는 평균이상 기온을 나타냈다. 호주 경우 9월 22일에 사상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반면 유럽은 평년보다 선선한 9월 기온을 나타냈다.

NOAA는 현재 추세대로면 2017년이 관측사상 기온이 가장 높은 '톱 3' 연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NYT "IS, 게릴라전으로 방향전환할 듯"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주요 거점도시였던 이라크 모술과 시리아 락까에서 연이어 패퇴했지만 IS의 세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IS의 수도가 무너졌지만 살아남은 지도자들과 전 세계에 분포한 추종자들이 있다"며 "서방과 중동의 대테러 당국이 지하디스트의 새롭고 치명적인 부활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 근동문제연구소의 에런 Y. 셀린은 "IS는 끝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그는 "IS는 네트워크 재건을 위해 기다리는 동시에 외부의 추종자들을 선동해 다양한 곳에서 테러를 계속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NYT에 따르면 최소 1년 전부터 IS 지도부는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 이른바 '외로운 늑대'의 테러를 기획·조종하며 게릴라전으로 전투의 방향을 돌리겠다는 전략을 암시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7일 쿠르드·아랍연합 시리아민주군(SDF)이 락까 탈환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 유럽 등의 대테러 당국은 숨어 지내는 테러조직원 '슬리퍼 셀(sleeper cell)'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각국의 대테러 당국 관계자들은 IS를 추종하는 외로운 늑대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면서 모술과 시리아에서의 패퇴가 IS의 잔여세력 규모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고위 관리는 NYT에 "지난해 IS가 유럽과 터키에 각각 수백명의 요원을 파견했다"고 했다.

특히 강력한 소셜미디어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온라인을 통한 선전전을 강화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최근 서구에서 발생한 IS 소행의 테러는 외로운 늑대가 온라인을 통해 IS 측과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자행됐다.

10월 실족·추락 등 등산 사고 연평균 900건 최다

행정안전부는 단풍놀이 등으로 이달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늘면서 등산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19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단풍 절정기(산 정상에서부터 80% 정도가 단풍이 들었을 때)는 17일 오대산을 시작으로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와 다음달 8일 내장산을 거쳐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2~23016년)간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는 연평균 3042만 명이고, 10월에는 평소(253만 명)보다 많은 487만 명이 국립공원을 찾는다.

등산사고도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재난연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발생한 등산사고는 연평균 6628건이며, 이 중 900건(13.5%)이 10월에 발생했다.

사고는 실족과 추락이 2177건(33%)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이 1075건(16%), 심혈관 등 개인질환에 의한 사고도 757건(11%)이나 발생했다.

가을 단풍을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날씨, 등반 소요시간, 등산로 정보 등을 미리 파악하고 산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예방요령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가을철 산행은 가급적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가 지기 한 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추위에 대비한 여벌의 옷과 초콜릿 등 비상식량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뉴시스

멋진 판화 만들거에요 19일 서울 금천구청 광장에서 열린 키즈 뮤지엄에 참여한 아이들이 마티스 그림 판화를 찍어내고 있다.

농어촌公 국유지 무단사용 전남 '최다'…"허술관리 탓"

"무분별 목적외 사용 · 농어민 피해로 귀결…철저 관리해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유지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무단사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19일 한국농어촌공사 국감 자료에서 최근 5년새 국유지 무단사용 적발 건수가 20배나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97건이었던 국유지 무단사용은 2014년 254건, 2015년 175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 1934건으로 20배로 늘었다.

5년간 무단사용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체 4458건 중 전남 1221건, 경북 926건, 전북 629건 순으로 많았고 강원이 101건으로 가장 적었다.

2016년 기준 무단사용유형별로는 작물식재 및 무단영농이 9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출입로 무단 사용 443건, 전주·가설건축물 등 무단설치 368건, 물건 무단야적 106건 등이었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국유지 무단사용을 방치했다가 차후 적발해 일반 점·사용료의 120%를 가산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무단사용 1934건 중 1833건에 대해 무단 사용료 징수 후 목적 외 사용을 사후 승인했다.

이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국유지 보존·관리에 힘써야 할 농어촌공사가 무단사용을 수수방관하며 수수료 징수에만 열을 올리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국유지가 개인 사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 국유지에 대한 무분별한 목적 외 사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훼손으로 결국 농어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국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캐나다 퀘벡주, 공공장소 히잡 등 착용 금지

캐나다 퀘벡주가 이슬람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부르카나 니캅, 히잡 등 베일을 공공장소에서 쓰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들이 부르카나 니캅 등을 착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일반인들도 대중교통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베일을 쓸 수가 없다.

북아메리카에서 이슬람 여성을 겨냥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베일 금지 법안은 이날 채택됐으며, 퀘벡주는 지난 2년 동안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해왔다.

뉴시스